

## 2019년 부산·경남 아동학대 신고접수 3,551건<sup>1)</sup> 시스템 점검 나선 부산일보와 KNN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은 양육자의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 충격과 분노가 큰 아동학대 사건 인권 보도준칙 지켜져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마련한 ‘인권 보도준칙’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이 주는 충격과 분노가 커 자칫 흥미 위주의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동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나온 보도준칙입니다.

하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는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입양 전 실명과 얼굴은 물론이고 피해 사진, 생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이슈 주목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해자의 학대 행위, 처벌 수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관련 시스템 점검과 같은 구조적 접근을 보여준 보도는 부족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 아동과 양육자의 관계가 헤드라인에서 ‘양부’, ‘입양아’, ‘양모’ 등의 단어를 통해 부각되면서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양상도 보였는데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3만45건 중 72.3%가 친생부모에 의해 이뤄졌고,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94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습니다.

1)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해랑 기자)에서 부산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뒀야 하므로, 부산시의 16개 구·군이 이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한 것인데요.

부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16개 구·군 중 5곳에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고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부산진구가 가장 높지만, 예산은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을 짚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수준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맞춰지면서 생기게 된 문제를 잘 전달했습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

부산 16개 구·군 중 5곳이 부족 신고 오면 최소 10명 조사 필요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 피로 누적 지자체 형편 따라 예산도 고무줄

속보=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아동학대 관리가 허술(부산일보 7일 10면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의 담당 인력 수가 적정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16개 구·군 중 5곳이 보건복지부의 권장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해운대·동·동래구·기장군의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인원보다 1~2명 씩 모자란 상황이다. 이들 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고 인원에 따른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권고기준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구·군	권고인원	배치인원	구·군	권고인원	배치인원
부산진	6	5	북	3	3
해운대	5	3	사상	4	4
동	2	1	사하	3	3
동래	4	2	서	2	2
강서	2	2	수영	2	2
금정	2	2	연제	2	2
기장	3	2	영도	2	2
남	3	3	중	1	2

\*출처: 부산 각구·군청

지키지 못했다”며 “인력난으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조사와 상담 권한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고 있다. 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해야 하는 인원은 최소 10명. 목격자부터 자인과 가해자, 피해자 등을 만나 수사 수준의 조사 절차를 밟아야 근거자료가

확보된다. 신고가 2건 이상만 동시에 들어와도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다.

인력을 요구한 한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실제로 아이 한 명이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조사해보면 형제나 자매가 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신고 1건이 3~4건의 조사 업무로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시행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직원 피로도가 상당하다. 이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4시간 현장 대기”가 원칙이어서 쉬는 날에도 부산을 벗어나지도 못한다. 또 다른 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종일 대기해야 한다. 결국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어도 전화를 손에서 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인데 재택근무는 인정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도 지자체가 감당하다 보니 지자체 살림에 따라 예산 폭도 고무줄이다. 지난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진구(316.7건)가 가장 높지만, 예산은 해운대구가 408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수영구(1256만 원)는 같은 기간 평균 신고 건수가 68건으로 비교적 적음에도 예산은 평균 199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동래구(280만 원) 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정부 지침에 따라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자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한 곳은 관련 예산이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120만 원이 전부인 곳도 있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역임한 조운영 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 건 잘 된 일이지만 인력이 너무 모자란 데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군별로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다양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 부산일보, 1/8, 12면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

부산일보의 해당 보도 이후인 1월 12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아동보호 종합센터와 양육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이 소식은 KBS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1/12, 단신), 부산MBC <부산시, 아동양육시설 학대 대응방안 방문 점검>(1/12, 단신)에서 보도했습니다. 두 단신 보도는 변 권한대행의 양육시설 방문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향후 5명이 추가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방침만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미치지 못했던 점 등 문제점에 대

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KNN은 2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바뀌는게 없다'>(1/8, 최한솔 기자)를 통해 학대예방전문 경찰관(APO) 지원 기피 현실과 협업상의 문제를 짚고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전문 상담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 '갈 곳이 없다'>(1/12, 박명선 기자)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피해아동 쉼터 시설 현황을 자세히 전달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한 곳 당 정원은 7명으로 부산은 4곳, 경남은 3곳뿐이어서 부산·경남 통틀어 49명의 피해아동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제도의 허점을 짚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증가 추이를 연결함으로써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전달했습니다.



▲ 아동학대와 관련한 KNN 보도 갈무리

지난해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 당시 지역언론의 보도는 피해아동의 CCTV 영상과 탈출과정, 학대 정황을 전달하는데 치중한 보도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번 ‘양천 아동학대’ 사건 국면에서는 부산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점검하고 피해아동 쉼터 시설 현황을 짚는 등 부산·경남의 학대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보완지점을 환기시키는 진일보한 보도를 보였습니다.